

당정 협의자료

이 자료는 4월3일 15:00시 이후  
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 (이자제한법 재입법 관련)

2001. 4. 3

재 정 경 제 부  
금융감독위원회  
공정거래위원회

## 1. 이자제한법 제입법이 논의되는 배경

- 제도권 금융기관의 여신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환위기이후 신용불량거래자가 증가하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비제도권의 사금융이 증가

\* 신용불량거래자 : 97년말 149만명 → 2001.2말 232만명

- 사채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공갈·협박 등이 횡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 증가

- 이에 따라, 의원입법으로 이자제한법 제입법이 추진되고 있음

\* 이자제한법 의원입법안(한나라당 이인기의원외 46명 발의)과 입법청원(참여연대)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(3.27일)

### ※ 이자제한법 제입법의 논거

- 이자제한법이 98.1월 폐지됨에 따라 제도권의 금리수준에 비해 터부니 없이 높은 금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 법의 제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

— 현행 민법에 근거하여 법원이 고리대금행위를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있을 경우 동 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

\*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인감증명, 동산양도계약서 등 각종 담보서류를 징구하고 있어 법원이 민법 제104조(당사자의 공박,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광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)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

## 2. 이자제한법 제입법시 문제점

☐ 이자제한법하에서도 고리대금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이 어려움

\*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구체적 판결을 통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적계약상 고리대금을 근절할 수는 없음. 실제 이자제한법이 있을 당시에조차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거래는 있었음

☐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경제여건, 자금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적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데 한계

○ 최고이자율을 낮게 정하여 시장금리가 이를 초과할 경우 “꺾기” 등을 통해 자금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 이자제한으로 사채시장이 위축되면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·개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

○ 최고이자율을 높게 정할 경우에는 그 수준까지의 금리는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도 있음

☐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예상치 못한 투기성 자금의 환율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일시에 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최고금리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곤란

☐ 미국, 독일,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19세기말 또는 20세기 초에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현재는 민법 등에 따라 간접규제

\* 일본은 예외적으로 利息制限法(54년 제정)에서 원금에 따라 이율의 최고한도(10만엔 미만 연 20%, 10~100만엔 18%, 100만엔이상 15%)를 차등규정하여 그 초과분은 무효(민법적 효력)로 하고 出資取締法(54년 제정)에 따라 연 109.5%를 넘는 계약을 한 때에 형사처벌(형법적 효력)

☐ 또한,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98년의 이자제한법 폐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(2001.1.18일)

### 3. 대응방안

- “이자제한법”의 재입법보다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나 고리대금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
- 이에 따라,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3.24일 민주당에서 “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 추진방향”을 발표
  - 이에 따라, 당 주관하에 Task-Force를 구성하여 “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”을 마련

#### ① 부당한 채권추심, 고리대금행위 단속강화

-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「신고센터」 설치
  - 금감원·소비자보호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고리대금,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받아 검·경찰, 국세청,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
-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 등을 기초로 검·경찰, 국세청 등이 일제 단속 실시
- 공정위는 超고리의 사채계약 등의 약관법,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
  - \* 과도한 선이자나 연체이자를 부과할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효화
  - \* 사채업도 “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”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연 이자율·연체이자율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반시 제재

#### ② 신용불량자관련 제도개선

- 연체금 상환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신용불량자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되 동 방안은 금융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은행연합회에 Task-Force를 구성, 검토 후 시행

### ③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

#### ☐ 신용카드 발급기준중 소득기준을 엄격히 운용

- “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자”로 카드사의 자체 카드발급기준을 정비토록 지도 (4월중)

\* 이미 2월 발급기준을 자율정비하고, 결과를 3월말까지 보고받아 점검 후 재정비 지도예정

#### ☐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회원유치 등 카드발급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(4월중)

- 주요 카드사를 대상으로 회원유치 및 카드발급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시정 조치예정

### ④ 카드사 등의 높은 연체 이자율 등에 대한 제재 강화

#### ☐ 시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카드사 등에 대해서는 행정제재

\* 공정위가 3월에 3개 카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2개월이내에 시정해야 함

### ⑤ 입법 문제

#### ☐ 대금업법과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(가칭) 제정 문제는 별도의 Task-Force를 구성하여 입법방향을 확정